

새마을운동, 잊힐 듯 잊히지 않는 잊힐 것 같은 이유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한울, 2014)

김우철*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을 가던 길에 우연히 창밖으로 구청 건물을 건너다보았다. 전면 외벽이 유리로 덮여 있고 밤이면 색색의 LED 조명이 불을 밝히는 초현대식 건물 앞에, 태극기와 나란히 녹색 새마을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산 최첨단의 유리 궁전을 배경으로 궁서체의 ‘새마을’은 아르마니 양복에 갓을 쓴 사람처럼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40년 전 저 깃발을 도안할 때 이루고자 했던 새마을은 이미 이룩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여전히 새마을의 상징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거기서 갈구하는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뜻일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석사과정(my-and-your@hanmail.net)

이 의문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놓치고 있는 지점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새마을운동이 영광의 시절이든 역사의 오점이든 이제 지나간 과거로 인식된다면 우리가 여태 새마을의 기호를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새마을운동이 ‘오래된 미래’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40년 전 새마을운동에 솔깃하게끔 만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 연구와는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새마을운동의 실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보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자가 봤을 때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가리는 일에 세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새마을운동은 구조적으로 실패했지만 대중의 뇌리에는 성공한 운동으로 남아있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1장과 8장에서 나오듯이, 박정희 스스로가 천명한 새마을운동의 핵심 목적은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고, 농가 소득 증대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새마을사업 때문이 아니라 이종곡가계와 통일벼 보급에 힘입은 것이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사라진 1980년대에는 농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시기에 농촌의 생활이 그 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책 곳곳에 실린 농민들의 구술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단정 짓는 것이 무의미한 두 번째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기현상이다. 1980년 설문조사에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한데(345쪽), 2010년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새마을운동을 꼽은 사람은 59%에 달한다.¹⁾ 비록 책에서 이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

5, 7, 8장은 그에 대한 힌트로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농민을 ‘주체’로 거듭나게 하려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셋째, 지금까지 논의의 상당수는 국가적 스케일에서 새마을운동의 성패를 다뤄 왔으나, 실제 사업이 진행된 지역과 마을 차원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얼룩덜룩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책을 봤을 때 3, 4, 6장에서 마을마다 각기 다른 성공과 실패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띈다. 결국 새마을운동을 성공 혹은 실패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진실의 일면만을 보고자 하는 태도며, 진정 필요한 자세는 서로 상반된 사실들이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책이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이자 이 책만의 미덕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의 내용에 관해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라는 표지의 부제를 길잡이 삼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보통 사람들은 ‘근대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근대는 전통과 대비되는 것이며,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견인한 집단은 강력한 국가와 관료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한국 농촌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은 무시되지 않았고 국가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근대화는 선택된 전통의 발판 위에 스스로 몰입하는 개인을 빚어냄으로써 가능했다.

농촌공동체의 ‘전통’은 새마을운동이 왜 하필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했고, 왜 마을마다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되었는지 해명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4, 6장은 새마을운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농촌 마을이 갖고 있던 공동체 문화에 기댄 측면이 컸다는 점을 밝힌다. 새마을운동 이전의 농촌은 한없이 빈곤한 것으로 표상되지만, 경제자본의 측면에서는 빈곤했을지라도 사회자본의

1) 두 설문조사 사이에 질문이 다르고 2010년의 조사는 복수응답이 가능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 국가를 발전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새마을운동을 성공했다고 전제했기이라는 점에서 1970년대 직후보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측면에서는 다양한 관계망과 규범, 상호호혜에 기초한 신뢰를 풍부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도 먹혀들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에 모든 전통이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 빠른 소득 증대, 곧 근대적 이윤동기를 부추기는 데 적합한 몇 가지가 선택적으로 재가공되었고, 정부의 지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자율과 자치의 원리는 약화되었다.

그다음 키워드인 ‘주체’는 새마을운동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었다. 1, 7, 8장은 국가가 농촌을 상대로 사용한 통치전략과 통치기술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탐구한다. 새마을운동은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은 부의 차별적 분배를 시정하는 것도, 농촌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아니었다. 부지런하고 협동하며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서 억압과 훈육도 활용되었지만 핵심은 농민들 스스로가 그러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떻게?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민들을 ‘민족의 기원’, ‘시대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우고 다른 어떤 집단과 계층보다 상징적으로 앞세움으로써 가능했다. 이러한 비결은 당시 농촌 여성과 새마을지도자를 다룬 2장과 5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때 당시, 박정희 당시에는 ‘국민주체대의원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청와대 지시 없이는 구속하지 말아라.’ 이러한 엄청난 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죽기 살기를 하고서 지도자들이 참…… 일을 했지. 그런 거 아니면 일하겠습니까?(223~224쪽)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352쪽). 개인은 열정을 쏟고 거기서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갈수록 농촌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구조적 종속으로 미끄러져 가는 데 별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새마을운동이 구조적으로는 실패

했지만 경험적으로는 성공한 운동으로 남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새마을운동이 온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전통이나 주체와 같은 새마을운동의 내적 원리만으로는 새마을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장에서 저자는 새마을운동에 성공한 마을과 실패한 마을을 비교하며 두 마을이 축적한 사회자본 혹은 전통의 차이가 결과에서도 차이를 낳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옛날부터 전승되는 전통에 관한한 두 마을의 조건은 유사점이 더 많다. 그것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새마을운동에 실패한 마을의 경우 이미 1960년대 재건마을운동이라는 사업을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을 누리면서 자부심을 가졌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때 받았던 용자 등이 부담이 되면서 정부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버린 결과 새마을사업에서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 저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지만 전통 혹은 사회자본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통이 강화되고 약화되는 시공간의 동적인 경로에 시선을 던지지는 않는다. 각 마을마다 특유한 역사적 궤적과 지리적 여건이 실질적으로는 전통이나 주체보다 새마을운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책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 역시 충분한 것이 못되는데, 왜냐하면 1970년대의 성공이 1980년대나 그 이후의 실패를 불러왔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빼두고 1970년대의 허와 실을 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책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태자면, 논문들의 순서를 달리 배치했다면 좀 더 주제의식이 선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상이한 대상에 관심을 가진 여러 저자들의 연구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을 가질만한 내용들끼리 가까이 있어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배치는 새마을지도자가 주체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다룬 5장이 공동체적 전통을 다룬 4장과 6장 사이에 끼어

있는 등 의아함을 자아냈다. 또한 이들 논문이 묶여 있는 2부가 ‘새마을운동과 마을공동체의 변화’라고 포괄적으로 명명되어 있어 딱히 이 속의 내용들을 관통하는 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새마을운동에서 공동체적 전통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 독자는 3, 4, 6장(그중 3장은 해외 사례)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새마을운동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이 속에서 입안된 국가의 통치기술을 궁금해 하는 독자는 1, 7, 8장을, 그러한 통치기술의 결과 빚어진 주체가 위에서 만들어진 담론을 아래로부터 열망하며 국가를 등 떠미는 역동성에 흥미가 있는 독자는 2, 5장을 읽기를 권한다.

이제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이 전적으로 성공했다 혹은 완벽히 실패했다는 주장은 양쪽 모두 설득력을 잃은 듯하다. 이렇게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하기가 모호해진 상황을 틈타 새마을운동은 대중의 긍정적 이미지를 등에 업고 정책 대안으로 복귀하고 있다. 게다가 새마을운동이 퍼뜨리려 애썼던 가치관은 신자유주의 한국에서 더욱 번창하고 있다. “안 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주의주의).” “문제는 사회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사사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를 담금질하며 내가 맡은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원해 보이는 사회의 개선보다 “당신은 남보다 특별하다”고 속삭여줄 권위자의 인정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 직후보다 오늘날에 더욱 널리 공감대를 얻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열정노동을 당연시하고 재능기부를 강요하며 나 자신을 헌신한 대가가 갈수록 보잘것없어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야말로 벌써 도착한 새마을운동의 미래라고 하면 과연일까. 나를 다그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2새마을운동마저 그러한 식이라면 이미 그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세대로서는 가슴 두근거리기보단 맥 빠지고 식상한 느낌이 들 것 같다. 이 책이 비록 뚜렷한 대안을 내놓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왜 새마을운동에 고파하는지, 정말 새마을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알맞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실마리가 되기에는 모자라지 않아 보인다.